

# 國 務 調 整 室



# 國務調整室

## 1. 總 括

지시사항 건수		완 료	관리종결	추진 중		미 착 수	비 고
				정 상	부 진		
총 계	21	14	-	7	-	-	-
단독주관사항	18	13	-	5	-	-	-
공동지시사항	3	1	-	2	-	-	-

## 2. 指示事項 目錄

### ○ 完了事項

일련번호	코드번호	지 시 제 목	완료연월일
14	09-11-01	실업대책자금의 효율적 집행점검	1999. 9
28	09-11-02	신속한 규제철폐	1998.12
67	09-11-03	규제정비계획 재수립	1998. 7
147	03-11-04	과감한 규제정비를 통한 예산절감 철저	1999. 9
174	09-11-05	수정변질된 규제개혁법안의 재입법 추진	1999. 1
197	02-11-06	국정혼선의 방지	1999. 3
238	06-11-07	학교용지확보특례법 추진에 대한 지원	1999.12
265	09-11-08	규제개혁 성과의 점검	1999.11
269	09-11-09	장애인 관련법 단일안 마련	1999.12
289	09-11-10	안전의식 강화 전기마련	2000.11
290	08-11-11	과학기술발전여건 조성 촉진	1999.11
492	09-11-17	“국민과의 대화” 후속조치 추진	2001. 4
537	09-11-18	테러예방대책 마련	2001.12
217	09-70-15	공무원의 부정부패 척결방안 강구	1999.10

▲ '98 - '00년 완료사항은 「1998년 - 2000년도 대통령지시사항 추진상황」 책자 참조요망

○ 管理終結事項： 해당사항 없음

○ 推進中인 事項

일련번호	코드번호	지 시 제 목	비 고
297	09-11-12	규제개혁 입법 추진	정상
376	09-11-13	지식정보화사회 구현을 위한 규제개혁 추진	"
390	09-11-14	전자정부구현을 위한 규제개혁	"
391	09-11-15	현장, 지방 중심의 규제개혁	"
411	09-11-16	반부패대책 마련	"
392	03-70-46	4대부문 12대 핵심개혁과제의 차질없는 추진	정상
525	09-70-61	연말연시 공직기강 확립대책 추진	"

### 3. 完了指示事項

#### 1) ‘國民과의 對話’ 後續措置 推進 : 492(09-11-17)

가. 指示內容(2001년 3월 5일, 제9회 국무회의시)

- 국민과의 대화시 제기된 문제와 설명·약속한 사항이 일과성에 그치지 않도록 해당부처가 민원사항, 약속사항 등을 챙겨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총리 중심으로 노력하고
- 질문자에게도 정부가 취한 조치를 성실히 답변해 줌으로써 국민과 정부 사이에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기 바람

#### 나. 措置內容

- 「국민과의 대화」 후속조치 추진 총리지시 시달(3. 8)
  - 국민과의 대화중 후속조치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소관부처별로 후속조치 계획을 수립·추진토록 지시
  - 질문자에게 알려주겠다고 약속하신 사항, 국민적 관심사항은 질문자들에게 상세히 알려주고 일반 국민들에게도 홍보토록 조치
- 국무총리 주재, 주무장관회의에서 후속조치상황 점검(3. 24)
  - 국민과의 대화중 후속조치가 필요한 19개 과제중
    - 14개 과제는 기추진중인 과제를 보완하여 시행
    - 4개 과제는 제도개선 등을 통해 새롭게 추진
    - 1개 과제는 노출된 문제점을 개선토록 조치
  - 정책개선, 인력·예산 확보 등이 필요한 과제는 관계부처간 협의를 통해 차질없이 추진토록 조치

#### 다. 事業成果

- 국민과의 대화중 후속조치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답변회신 등 즉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국민의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도 제고

## 2) 테러豫防對策 마련 : 537(09-11-18)

### 가. 指示內容(2001년 9월 25일, 제43회 국무회의시)

- 테러대책 강구를 위해 Task Force를 구성하고 전 국민이 참여해 테러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람.

### 나. 措置內容

- 정부상황관리체계 구축·운영 (2001.9.12이후)
  - 국무조정실에 ‘정부종합상황지원반’을 두고 외교·안보·경제·대테러·시도 등 5개 대책반 운영
- 관계부처 합동으로 Task Force를 구성하여 「테러방지종합대책」 마련
  - 국무조정실·국방부·행자부·정통부·복지부·환경부·국가정보원·경찰청 등 관계기관 실무자로 구성된 Task Force를 통해 대책 마련을 위한 실무작업(2001.10.20 ~ 10.31)
  - 국무조정실장 주재 관계차관회의(11.2, 11.5) 및 국무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(11.6)를 통해 「테러방지종합대책」 확정·발표
  - 국무조정실장 주재 관계차관회의(12.29)를 통해 종합대책 후속조치 추진상황 점검
- 「테러방지법(안)」 국무회의 의결(2001.11.27)
  - 국정원 제정안을 토대로 국무조정실의 이견조정을 거쳐 정부안을 확정, 국회제출

### 다. 事業成果

- 새로운 테러유형에 대비할 수 있는 국가대테러 시스템 구축
- 대테러 활동을 위한 법률적 근거마련 및 부처간 업무분장·협조체제 구축

## 4. 推進中인 指示事項

### 1) 規制改革 立法 推進 : 297(09-11-12)

가. 指示內容(1999년 12월 21일, 제52회 국무회의시)

- 국회심의과정에서 규제개혁법안의 본질적 내용이 훼손되는 경우에는 거부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해 주기 바람.

#### 나. 지금까지 措置內容

- 사업자단체 관련 법률의 재입법 추진 검토
  - 국회 수정법률 중 사업자단체 관련 법률의 경우, 상당수의 단체가 이미 해당법률을 개정하여 복수단체간 서비스 경쟁 촉발·독점 사업기관화 방지 및 단체 운영의 자율성 제고 등 상당한 성과를 거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
  - 대한변호사협회, 대한약사회 등 일부 단체의 경우 해당 단체 법률개정안의 폐기로 인하여 사업자 단체간 형평성 시비 등 갈등을 초래하고 있어 재입법 추진을 검토
- \* 재입법 추진대상 사업자단체 관련 법률
  - 약사법(보건복지부)
  - 의료법(보건복지부)
  - 변호사법(법무부)
  -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(건설교통부) 등 4개 법률
- 재입법 추진을 위한 당정협의 개최
  - 민주당 개혁 추진분과위원회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향후 재입법 추진과정에서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

#### 다. 向後 推進計劃

- 2002년에도 당정협의 및 소관 상임위 등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, 사업자 단체 규제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를 제고시키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

## 2) 知識情報化 社會 具現을 위한 規制改革 : 376(09-11-13)

### 가. 指示內容 (2000년 6월 28일, 제2회 공공부문 혁신대회시)

- 지식정보화 사회로 이행하는데 장애가 되는 규제에 대한 개혁을 조기에 마무리하고 규제 개혁위원회가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

### 나. 지금까지 措置內容

- 부처별 세부추진계획을 확정, 각 부처에 기 시달 (국무총리 지시 2000-25호, 2000.9.27)
  - 2000·2001년도 추진대상 과제 총81건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마련, 규제개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, 추진완료

#### \* 주요 추진과제

- 전자입찰시스템 구축을 위한 제도개선(재경부, 조달청)
- 신기술 개발 진흥을 위한 특허제도 개선(특허청)
- 외국인 투자제도 규제개혁(산자부) 등

- 2002년도 제2단계 지식정보화 추진대상 29개 과제를 선정, 규제개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·대통령께 보고하고 2002년도 규제정비지침에 포함, 각 부처에 시달(2001.11.29)

#### \* 주요 추진과제

- 금융신상품 개발관련 규제완화(재경부)
- 대국민 의료기관 정보제공 허용범위 확대(복지부)
- 산업보건관리체계의 합리적 개선(노동부) 등

### 다. 向後 推進計劃

- 2002년도 추진대상 과제에 대하여 조속히 개선방안을 마련, 금년 상반기중 마무리



### 3) 電子政府 具現을 위한 規制改革 : 390(09-11-14)

가. 指示內容(2000년 9월 19일, 규제개혁 보고회의시)

- 정보화 기술을 정부혁신에 활용하고 전자정부를 조기에 구현할 수 있도록 관련규제를 정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

#### 나. 지금까지 措置內容

-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민원서비스 혁신사업 추진
  - 사업기간 : 2001. 10 ~ 2002. 11. 30 (286억원)
  - 전자정부 단일창구 공동운용시스템 구축
- 「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」 제정·시행
  - 2000. 7. 1 제정·시행
  - 전자서명 사용근거, 전자민원 처리대상 인터넷 공표 등

#### 다. 向後 推進計劃

- 2002년 상반기중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 개정 추진
- 민원서비스 혁신사업 시범서비스(2002. 10) 및 본격 서비스 추진(2002. 12)

#### 4) 現場・地方中心의 規制改革 : 391(09-11-15)

##### 가. 指示內容(2000년 9월 19일, 규제개혁 보고회의)

- 규제개혁의 효과를 현장에서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나 일선 행정기관의 이행실태를 철저히 점검할 것

##### 나. 지금까지 措置內容

- 중앙부처, 지자체 규제개혁 이행실태 점검 실시
  - 2000. 하반기, 2001. 상반기 두차례에 걸쳐 중앙부처,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전반적인 규제개혁 이행실태에 대해 점검
- \* 2000. 하반기 : 11. 20 - 11. 28 (총 12개기관, 78건 적출, 시정조치)
  - 「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모델」로 자치단체 실정에 맞도록 운영확인
  - 중앙부처 규제정비사항이 자치단체조례에 반영되도록 조치
  - 감사 및 사고발생대비한 법령미근거 서류 과다 징구등 시정
- \* 2001. 상반기 : 5. 21 - 5. 30 (총 16개기관, 127건 적출, 시정조치)
  - 일부 중앙부처에서 규제위의결 정비계획이 국회심의유보, 관계부처 협의지연으로 미 이행사례 적출
  - 규개위심사없이 훈령, 예규, 공고, 고시등 하위규정 제·개정 사례 시정조치
  - 전부처에 대해 정비계획, 중점과제 및 하위규정 제·개정시에도 규제심사 받도록 촉구, 추진상황 지속관리
- \* 2001. 하반기 : 1단계-10. 8 ~ 10.18, 2단계-10.29 ~ 11. 9 (총25개기관, 감사원과 합동감사)
  - 중앙부처에서는 중점 점검 당시보다 많은 진전이 있었으나 이와 별도로 관행 또는 행태에 의한 규제 및 미등록·누락규제 적출
  - 상위법령규제 폐지후 하위규정에서 부활하는등 형식적 규제 실적 관리 적출

##### 다. 向後 推進計劃

- 기존규제 및 신설·강화규제에 대한 규제순응도 조사 및 지침시달→순응지향적 규제개혁 추진
- 분기별 각급기관 규제개혁 이행실태 지속점검

※ 지금까지 총 8차례에 거쳐 총132개 기관 629건 적출 (8차 결과는 감사원 내부 보고중)

## 5) 反腐敗 對策 마련 : 411(09-11-17)

### 가. 指示內容(2001년 1월 9일, 제2회 국무회의시)

- 앞으로 부패척결활동을 철저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감사·처벌과 함께 특히 제도적으로 부정부패문제에 대처해야 함

### 나. 지금까지 措置內容

- 국민생활과 직결된 부패취약분야를 중심으로 행정제도개선 추진
  -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하에 보고회의를 개최하여 각계의 추진성과를 점검하고, 범국가적 부패척결 분위기 조성 및 각급 행정기관에서 마련한 420개 행정개혁과제를 확정(7.4)
  - 불투명한 규제의 정비, 전자정부의 구현, 대민접촉 기회의 축소, 시민단체의 참여확대 등
  - 42개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진실태 및 성과를 분기별로 점검·평가함으로써 제도개선의 실효성을 확보
- 부패방지법의 제정('01.6.28) 및 부패방지위원회의 출범('02.1.25)
  - 적발·처벌위주의 부패척결활동에서 벗어나 부패의 토양이 되는 제도·환경·의식의 개선등 종합적인 부패방지시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기반과 추진체계를 마련
- 부패방지 시스템 구축 및 가동
  - 중앙부처·지방자치단체에 「행정제도개혁기획단」을 구성하고,('01.2) 전자입찰구매제도, 청렴계약제, 각종 위원회에 시민단체 참여, 단속실명제, 행정정보공개 등 부패방지를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도입·운영
- 국제투명성기구(TI)가 발표한('01.6) 국가별 청렴도 지수가 48위에서 42위로 상승하고, 대부분의 행정부서에서 민원인들이 깨끗해져 가는 행정의 모습을 점차 인식

### 다. 向後 推進計劃

- 각 부처의 자체적인 부패방지 제도개선 노력을 강화
  - 현재 가동중인 부패방지시스템은 지속적으로 보완·발전시키되 부처별 부패취약분야에 대하여 핵심과제를 선정하여 집중 추진
- 부패방지위원회는 각 부처의 부패방지 노력을 시스템적으로 관리
  - 각 기관장의 인식제고, 기관별 청렴도지수 평가, 내부고발제도의 활성화, 반부패 의식개혁에 대한 교육·홍보의 강화 등

## 共通 1) 4大 部門 12大 核心改革課題의 蹉跎없는 推進 : 392(03-70-46)

가. 指示內容(2000년 10월 4일, 4대부문 합동보고회의시)

- 관계부처 장관은 4대부문 핵심개혁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공공부문의 개혁을 내년 2월말까지 반드시 완료토록 할 것

### 나. 지금까지 措置內容

< 2000년도 >

- 각종 경제활동관련 규제완화를 위하여 57개 중점과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
  - 정보통신산업관련 규제합리화(정보통신부)
  - 기업의 유가증권 발행관련 규제개혁(금융감독위원회)
  - 중소기업 고유업종 개편방안(중소기업청) 등
- 경제5단체가 건의해 온 과제중 규제개혁관련 18개 과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
  -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지분소유요건 완화
  - 보험사의 자산운용시 주식투자한도 확대
  - 산업단지내 산업용지의 공장설립진 매매 제한(가격·대상) 완화
  - 폐기물 예치금 및 부담금의 부과대상품목 축소, 효율의 합리적 조정 등

< 2001년도 >

- 25개 중점과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
  - 맥주제도시설 기준완화방안(재정경제부)
  - 진입제한 및 경쟁제한적 규제개선방안(공정위)
  -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겸업제한제도 개선(정통부) 등
- 경제5단체 건의과제 234건을 개선
  - 대북위탁가공물품에 대한 반출입 검사 완화
  - 남북교역시 반출입 승인 대상품목의 단계적 축소, 승인기간 단축
  - 여성근로자의 시간외 근로제한 폐지 등

### 다. 向後 推進計劃

- 국가경쟁력 향상에 걸림돌이 되는 개혁 미흡 분야의 중점개혁과제를 선정, 지속적인 규제 개혁을 추진할 계획

## 共通 2) 年末年始 公職紀綱 確立對策 推進 : 525(09-70-61)

가. 指示內容(2001년 11월 27일, 제51회 국무회의시)

- 연말연시를 맞아 기강이 해이되기 쉬움. 특히 공직자들의 기강해이를 잘 점검해 주기 바람

### 나. 지금까지 措置內容

- 공직기강 관계 장관회의 개최
  - 재경·교육·행자·법무부 등 주요부처 관계 장관회의('01.12.7)를 개최하여 「연말연시 공직 기강 확립을 위한 특별대책」을 수립, '02.2.15까지 강력하게 추진하여 안정적인 국정운영 기반을 조성
- 공직기강 특별점검 추진('01.12.12~'02.2.15)
  - 국무총리실에 「정부합동 특별 점검단」을 설치·가동하여 민생 및 인허가 등 국민생활과 직결된 공직자 부조리, 공직자의 정치 관여행위 등을 집중 점검하고, 현안과제 지연·주요 국정과제 부진사례 등에 대한 직무점검을 지속적으로 전개
  - 재경·교육·법무·행자·건교부, 금감위, 경찰·국세·관세청 등 9개 기관에 기관장 직속의 「자체 점검반」을 설치하여 기관별 취약분야 공직 부조리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실시

### 다. 向後 措置計劃

- 전기관 감사관 회의 개최
  - 연말연시 공직기강 특별대책의 추진상황을 중간점검하고, 미비점에 대한 보완대책을 마련 하여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 43개 전부처 감사관회의를 개최('02.1.17 예정)
- 공직기강 관계 장관회의 개최
  - 연말연시 공직기강 특별대책의 추진결과를 분석·평가하고, 2002년도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기본방향 및 주요대책을 마련하여 각급기관에 시달('02.1월말 예정)

